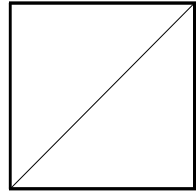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91 호
의 결 연 월 일	2021. 5. 26. (제 10 차)

의  
결  
사  
항
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회의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1. 5. 26.

## 1. 의결주문
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(법률 제17878호, 2021. 1. 5. 공포, 7. 6. 시행)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골자

가.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대상 거래 (안 제3조의2)

-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(토스,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거래)도 반환지원 적용대상 거래에 포함

나.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(안 제3조의3)

-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\*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제2항제3호(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·관리업)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\*\*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

\* 은행(외은지점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포함), 금융투자회사(증권금융 포함), 종합금융회사, 저축은행·신협·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,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, 우체국

\*\*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

다.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(안 제24조의6)

-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❶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, ❷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, 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 매입계약을 해제 가능하도록 함
- 예보가 매입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서면, 우편, 전화 또는 팩스, 문자 등으로 해제하도록 함

라. 착오송금 관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 마련(안 제24조의7)

- 착오송금인(반환지원 제도 신청자)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

마.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(안 제18조)

- 예보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권별 특성·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‘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’으로 근거 규정을 정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(규제심사 비대상)

라. 기타 : 입법예고(1차 : '21.2.10~3.23, 2차 : '21.3.31~5.10\*)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

\* 1차 입법예고 후 송금인의 고유식별정보 수집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재입법예고 하였음

##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) 법 제2조제9호에서 전자지급수단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.

제3조의3(자금이체 금융회사등) 법 제2조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
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
3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
4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(이하 “상호저축은행중앙회”라 한다)
5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
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
7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(이하 “신용협동조합중앙회”라 한다)
8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9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
10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금융회사(이하 “종합금융회사”라 한다)

11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(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)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

12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
13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
제10조제1항 중 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4. 신용협동조합중앙회

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제18조제5항 본문 중 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정기예금”을 “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채권중”을 “채권 중”으로,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24조의6을 제24조의7로 하고,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6(매입계약의 해제) ① 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

2.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
3.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② 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1. 서면 교부
2. 우편 또는 전자우편
3. 전화 또는 팩스
4.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

제24조의7(중전의 제24조의6)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관한 사무

## 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3조의2(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 수단) 법 제2조제9호에서 전자지급수단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3조의3(자금이체 금융회사등) 법 제2조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</u></li> <li><u>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</u></li> <li><u>3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</u></li> <li><u>4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(이하 “상호저축은행중앙회”라 한다)</u></li> <li><u>5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</u></li> <li><u>6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</u></li> </ol>

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2조(업무의 대행) ①법 제20조</p>	<p>7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(이하 “신용협동조합중앙회”라 한다)</p> <p>8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</p> <p>9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</p> <p>10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금융회사(이하 “종합금융회사”라 한다)</p> <p>11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(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)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</p> <p>12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</p> <p>13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업무의 대행) ①-----</p>
---	---



에 따른 대행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3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(이하 “상호저축은행중앙회”라 한다)

4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(이하 “신용협동조합중앙회”라 한다)

② (생략)

제15조(차입의 방법 등) ①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보금 융회사별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·운

-----  
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4. 신용협동조합중앙회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차입의 방법 등) <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1. 상호저축은행중앙회

2. 증권금융회사

3.~ 6. (생략)

제18조(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) ① ~ ④ (생략)

⑤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의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. 다만,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중 보험금(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.

<삭제>

<삭제>

3.~ 6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

융상품-----

-----

-----.

----- 채권 중 -----

-----

-----

-----

그렇지 않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24조의6(매입계약의 해제) ①

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

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

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

해제할 수 있다.

1.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

2.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

3.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
② 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1. 서면 교부

2. 우편 또는 전자우편

3. 전화 또는 팩스

4.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

<p><u>제24조의6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</u></p> <p>①금융위원회(제1호,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한다), 금융감독원의 장(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), 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(제15호, 제16호 및 제18호의 사무만 해당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~ 18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.</u></p> <p><u>제24조의7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</u></p> <p>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9.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관한 사무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구조개선정책과
연 락 처	02-2100-2911